

이 대통령,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

24~26일 미국 실무방문... 트럼프와 첫 대면 관세협상 확정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출국할 예정으로, 밤이 일정에 김해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

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 협상 및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성명이 발표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 중인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화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안보 분야 의제

로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아직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미 측은 대만 문제 등에서 한미동맹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이번 회담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사안 논의도 합계투기가 불가피하다.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달러로 큰 틀에서 정해졌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업 협력까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과 농축 산물 추가 개방 여부 등은 미국 쪽과 많이 엇갈리고 있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도 관건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 25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방미 형식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으로 결정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 간 상호 관심 의제

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공식 방문과 달리 환영식은 생략된다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한미 회담에 기업인이 동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관세 협상 당시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향하는 등 기업인의 협상 측면 지원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관세 협상 이후에도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의 구체적 대미 투자 금액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 대변인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의 동행 여부에 대해 "경제 협력 과정에서 가능할 수 있겠으나 아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방미 기간 한국 기업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포스코이엔씨, 비상경영체제 돌입 포스코이엔씨는 12일 인천광역시 송도본사에서 최근 근로현장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 송치영시장과 임직원 및 전국 100여개 현장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포스코이엔씨는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해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조례안 공포·시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단독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8월 8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18조의2(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신설이다.

이 조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15조에 규정된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분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를행정기관 등)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도의회, 감사대상기관의 장,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이첩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등 대안, 주민과 숙의해야”

민중 안호영 의원, 김민석 총리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 “지역 여론 살펴 판단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와 전북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전북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 방향을 정리해 불필요한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행정통합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주민과 함께 전북형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반대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냐”고 물으며 “(완주·전주 행정통합) 사안의 경과를 잘 알고 있다. (행정통합의)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는 “내용은 이해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지역 여론을 충분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사진 오른쪽)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와 전북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답했다.

안 의원은 그간 기자회견, 언론기고, 방송 등을 통해 “최종 결정권은 주민에게 있으며, 공론화를 통해 전북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날 면담에서도 “행정통합만이 답이 아니며,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대안을 주민과 숙의해 나가

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실천 가능한 발전 모델을 설계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주민 숙의에 기초한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완주=염재복 기자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지난 전반기에 관내 7개 학교 12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회 체험 프로그램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남원 하늘중 학생자치회의 학생들은 △학교에 학생 휴게실 설치 △학교폭력 처벌 강화를 제안하는 2분 자유발언과 △교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지원 건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한 청소년 환경교육 건의안을 발표하며 학교 발전을 위한 제언을 내었다.

또한, 강당에서 체육 물품을 사용한 후 제자리에 정리하지 않으면 강당사용을 제한하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라는 2건의 안건을 찬·반 토론을 통해 처리하며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김영태 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 2026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

29일까지 학생승마체험 지원 등 4개 사업 대상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말산업육성을 통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모집은 전북의 말산업을 인프라를 더욱 탄탄히 하고, 도민 누구나 말과 함께하는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된 4개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학생승마체험 지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승마용마 조련 강화 지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말 사육농가, 승마장 운영자 및 농업법인 등은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군·구 산하에서 8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군과 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되며, 심사평가단의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말산업을 국민소득 증가와 생활 수

도, 고액 체납자 압류등산

313점 전자공매... 내달 1~3일

전북특별자치도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등산 전자공매'를 연다.

이번 공매는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민 누구나 웹포 공매포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받는 방식이다. 입찰 기간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낙찰자는 9월 4일 발표된다.

출품 품목은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 40명의 가액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들이다. IWC·불가리, 까르띠에·구찌 등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골프채 등 총 313점의 고가·인기 품목이 포함됐다.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는 입찰기간 중 공매 물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매각은 별도의 위탁 수수료 없이 도가 직접 진행해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지속 고민할 것”

김의겸 새만금청장, 전북 건단연과 간담회 건의사항 청취 건단연, 수주확대 지원·지역업체 우대 제도개선 등 건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12일 지역기업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참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회에서는 소재철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건설경기의 어려움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전북도내 건설업체는 5,377개로 전국의 5.3%를 차지하지만, 건설 규모는 7.3조원으로 2.9%에 불과해 지역 내업체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수주확대 지원과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제도개선, 수주를 제고 유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이만호 기자



김의겸 청장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을 밝히면서, 아울러 “건설현장은 항상 많은 위험이 수반되는 곳으로,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공노조위원장 “과거 아쉬움 넘어 미래 열자”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관련

송상재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2일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 “과거의 기회를 돌아보고, 미래 가능성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추진된 노동통합 과정에서 전주와 완주가 광역시로 승격하는 기회를 놓친 것은 아쉬운 역사”라며 “당시 통합이 이뤄졌다면 전북의 위상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고, 청년 인재 유출 문제도 완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도시가 두 곳에 나눠 조성돼 전주광역시와 전북도가 함께 성장의 날개를 달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며 “전북의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라는 현실은 그때의 기회를 놓친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찬성 측의 논거로 △행정 효율 증대 △예산 절감 △생활·경제권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면적

확대에 따른 정치적 위상 강화와 극비 확보 가능성을 소개했다. 반면 반대 측의 우려로는 △원주군 고유 역사·문화 보존 필요성 △자치권 약화 우려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불확실한 행정·재정 계획 △경제 효과 과장 논란 등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찬반 논쟁은 사회가 성숙하는 과정이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부당한 행위는 건강한 대화가 아니다”라며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풀어야 하며, 결사 저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합이 가져올 넓은 생활권, 강화된 행정력, 높아진 정치적 위상과 경제적 기회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번 주민투표가 전북의 가능성을 다시 열고, 더 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은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결정이 원활히 이행되고 주민 삶이 향상되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